

현대사회와 大學의 機能(下)

表 時 烈
(高麗大 行政學科)

대학이라는 조직은 전통적으로 학문의 가치를 보존·발전시키는 기능을 하여 왔다. 즉, 연구를 통한 진리발견과 강의를 통한 진리전달이 대학의 고전적 기능이다. 최근에는 대학도 하나의 사회조직으로 국가 또는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사회에 대한봉사를 대학의 기본기능으로 여긴다.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대학의 기본기능간에 갈등이 있음을 지적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의 기본기능이 어떻게 변화 또는 도전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3. 技術・情報 社會에서 大學의 기능

Naisbitt 가 1982년에 *Megatrends*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고도의 기술(high-tech)과 정보(information)의 사회이다. 인류의 오랜 농경생활에서 제조업 위주의 근대 산업사회로 변천하는 데 10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근대 산업사회에서 기술·정보사회로 변천하는 데는 1956년의 소련 인공위성(Sputnik)의 발사를 기산점으로 하여 겨우 30년 걸린 셈이다. 빠른 교통수단은 물론 인공통신위성, 컴퓨터, 팩스, 케이블 TV 등의 급속한 발전이 기술·정보 사회를 가져왔다. 산업사회에서는 전략적 자원이 자본이었다면 기술·정보 사회에서의 전략적 자원은 노하우(know-how), 즉 정보에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과 같은 전문화된 지식(professional

knowledge)을 요구하는 직업이 급증하게 된다(Naisbitt, 1982 : 11~19).

1) 大學의 基本機能 變화

고도의 기술·정보가 중요시 되는 知識社會(learning society)는 특히 대학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대학의 기본기능이 지식의 창출과 그 전파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생수의 증가이다. 기술·정보 사회에서는 전문화된 지식이 생존에 필수적이므로 대학진학이 중요한 문제이다. 기술·정보 사회에서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의 진학 기회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 특히 성인들도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익혀야 하므로 시간제(part time) 등록이 가능하여야 하고,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가난한 자는 가진 자와 빈부차가 더욱 커질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기술과 정보에

의 접근 보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정보 사회는 數科課程의 내용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바, 전통적인 인문과학(liberal arts) 중심에서 겹차 전문지식 또는 직업과목(vocational major)으로 그 강조 분야가 옮겨지고 있다. 이는 대학의 기본기능이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상아탑적 진리추구 이어야 하는가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전통적인 인문과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외부환경이 요구하는 직업기술을 다른 대학과 경쟁적으로 교육하여야 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의 교과과정에 세부적인 전공과목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 요구이지만, 대학은 원래 진리추구의 방법과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곳이다. 대학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그러한 아이디어의 전제조건을 검토하며 합리적 의미를 탐색하는 批判的思考(critical thought)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새로운 정보와의 관계를 찾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편의상 정보를 학문분야(discipline)로 분류하는데, 이는 한 분야 이상 아는 것을 어렵게 하고, 학문분야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도 지장을 준다. 과학자 Capra는 “물질은 동떨어진 실체가 아니고 그 환경에 불가피하게 연루되어 있는 것 이므로, 물질의 본성은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한다(Capra, 1975 : 195). 따라서 안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새로운 정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에서는 多學問分野를 통한 또는 學問分野間(across and between discipline)의 정보관계를 중요시하여야 한다(Apps, 1988 : 115~117).

요컨대 고도의 기술·정보 사회는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에 세부적인 전공과목을 요구하고 학문분야도 세분화시킴으로써 지식추구의 본래의 성격, 즉 비판적 사고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내지 환경과의 관계 파악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대학은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함은 물론, 학문 간의 관계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知識產業體와 大學의 관계

기술·정보 사회가 대학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대학과 지식산업체(knowledge industry)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이다. 대학이 지식산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는 형태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훈련, 연구지원,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기업체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훈련을 받은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대학은 작문, 수학, 비판적 사고, 문제의 해결 등과 같이 기초적인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 의학·법학·전자공학과 같이 고도의 전문지식도 습득시킨다. 전자는 주로 전통적인 순수 학문활동 분야이며, 후자는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 분야이다. 전자의 기초지식이 기업체의 모든 직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업체는 이러한 순수학문의 기초적 기술 분야에는 적절적인 재정지원을 별로 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고도의 기술분야를 최신화(update)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 간의 두번째 협력 형태는 대학 연구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다. 기업체의 재정지원은 대부분 대학의 연구에 대한 지원 형태인데 재정지원을 하는 기업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한적인 기술 분야, 예컨대 컴퓨터 과학·의학·생물공학 특히 소재공학과 로봇 등에만 연구비가 집중 지원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주로 개별교수와의 컨설팅 계약이지만, 최근에는 공식적인 파트너십이나 연구센터를 통한 장기의 대규모 연구계약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과 기업 간의 세번째 협력 형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다. 회의·심포지엄·교수와 연구원 간의 공동출판 또는 기업체의 자문위원회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교수의 연구결과와 대학시설을 기업이 활용하는 것이 기술이전의 일반적 방법이다.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대학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경제력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이점도 있지만,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대학과 기업의 밀착은 대학으로 하여금 상업적으로 효용성 있고,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연구를 추구함으로써 객관적 진리추구라는 대학의 핵심기능을 크게 위협한다. 기업들이 商業的 效率性이 있는 분야를 지원할 것이므로 교수들의 연구주제 선택도 그런 분야로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대학에서 중시되어야 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가 소홀히 되고 응용과학 분야에로 연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둘째, 대학에서는 연구와 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강의보다 연구가 강조되고, 그 결과 학부 학생에 대한 강의 및 학생지도 기능이 소홀해진다. 기업체로부터 研究財源을 확보하는 교수가 학교 행정가로부터 높이 평가되므로 교수들은 연구와 출판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학부 학생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학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강의의 질적 수준도 교수가 학생상담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참여하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Fairweather, 1989 : 392), 교수가 강의를 소홀히 하고 기업체의 상담에 전념한다면 이는 대학의 본래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셋째, 대학과 기업의 밀착은 연구과정 내지 결과에 대한 公開性을 위협한다. 과학적 연구는 연구의 결과는 물론 그 과정도 공개되어야 한다. 중간보고도 자주 공개되고 토론을 하는 것이 객관적 진리발전의 과정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들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경쟁심리 때문에 완전히 만족할 단계까지는 정보를 비밀로 한다. 더구나 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는 통상 기업에서 연구 결과를 상품화하기 때문에 특허를 얻을 때까지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연구의 공개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수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또한 대학과 기업의 밀착은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해야 될 대학의 연구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 과학자는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과정, 결과의 평가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자세를 지니는 것이 전통이었다. 물론 동료와의 경쟁·명예·금전의 유혹이 늘 있지만 대학교수, 특히 과

학자의 연구는 사심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동료들은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원을 받아왔다. 대학과 기업의 밀착은 연구가로 하여금 상업적 활동에 전념해 하여 학교활동을 소홀히 하게 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 하는 유혹이 많아 결국 대학이 쌓아온 오랜 신뢰성을 상실해 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Bok, 1982 : 150~151).

끝으로 대학의 막대한 재정수요는 대학과 기업 간의 관계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총장과 같은 대학 행정가의 리더십을 기업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자금확보 능력으로 평가하게 한다. 총장은 대학의 기본기능들을 균형있게 보는 시관이 필요하고 구성원들의 요구를 학교정책에 적절히 반영해야 하며 대학 환경인 외부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주로 기업을 통한 자금확보만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大學行政家의 評價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기술·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산업체가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연구분야의 불균형, 강의와 학생지도의 소홀, 연구의 공개성 위협, 사심없는 과학자의 연구분위기 훼손, 재정확보 위주의 대학 행정가의 관심편중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대학과 기업의 밀접한 관계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실용적인 강의, 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대학과 기업의 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어렵게 유지하여 상기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느냐가 오늘날 대학 행정가들의 주된 과제이다.

3) 研究者의 社會的 책임

기술·정보 사회는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방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최신 과학의 발전은 공기와 수질 같은 환경은 물론 인간의 생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쟁 중의 잔혹한 생체실험, 히로시마의 원폭피해 같은 역사적 체험은 물론이고, 최근 유전공학 분야에서의 DNA 발견으로 무슨 기

형물이 만들어져 어떤 사회적 위해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발전의 중립성을 내세워 연구결과에 대하여 社會的責任이 없다는 과학자들의 종래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상당수 연구자들이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전쟁관련 연구를 거부한다든지, 중앙정보부(CIA)와 같은 특정 정부기관과의 연구계약을 회피하는 것도 그 연구 결과가 비인도적으로 또는 무책임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대학 연구는 기초적인 연구이므로 그 실질적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 연구의 실질적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악용되어 위험한 사태가 예상될 때에는 그 사태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반 시민에게 그 위험 가능성에 대해 경계시켜야 할倫理的責任이 있다(Bok, 1982 : 172).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은 자연과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결과를 논쟁중인 정치적 문제를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회과학자들의 연구결과는 타당도나 신뢰도가 낮은데도 반박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정책이나 일반인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과학자들은 자기 연구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특히 논쟁거리인 공공문제를 연구할 경우에는 연구의 설계, 방법, 샘플(sample)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연구의 범위를 명백히 하여 경험적 발견과 정책적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학자의 임무는 진리추구임을 새기고, 학문적 연구의 특정 정책결정에 대한 효과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Bok, 1982 : 172~175).

정부는 대학 연구결과를 정책결정의 정당화에 이용할 뿐 아니라, 특정연구를 제한 또는 연구결과의 배포를 금지하며, 연구비의 배분을 통하여 특정연구를 독려하기도 한다. 정부가 연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이나 안전을 해칠 경우 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

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연구제한과 국가안보 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정부가 거증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결과의 배포를 금지할 경우에도 배포되었을 때 국가나 국민에게 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될 때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New York Times v. U.S.).

정부의 연구비 지급도 대학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자연과학 위주로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인문·사회과학 분야 종사자의 사기가 저하되어 과학발전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약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지급 경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히 심사 결정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급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는가는 대학의 자주성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4. 國際化시대에서 大學의 기능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불리는 국제화 추세이다. 국제 무역은 물론 에너지와 환경오염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들의 공동문제로서, 우리에게 지구를 공유한다는 것을 실감시킨다. 본절에서는 국제화 추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국가 내지 민족 지상주의와의 갈등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교육의 목적, 추진전략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1) 國際화추세 대 民族主義(Global Village vs. Nationalism)

국제화 경향이 당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국가 내지 민족 지상주의와의 갈등이다.⁶⁾ 국제화란 국가 내지 민족주의를 초월한 이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예컨대 외국말을 배우고 외국 문화를 익히는 이유가 상대방 국민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유지하여 상호공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에서 상대방 국가를 이기

6) 국가 내지 민족주의(nationalism)란, 국가는 독립된 자주권(sovereignty)을 갖는 실체로서 한 국가의 이익과 가치가 여타의 이익이나 가치보다 먼저라는 주장이다(Brenilly, 1985 : 3).

고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원래 인간본성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자기집단·자기나라의 이익을 앞세운다. 인간의 본성을 이처럼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근대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다윈의 진화론으로 확립되었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이나 빵가게 주인의 자비에서가 아니라 자기이익을 스스로 챙기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표현하였다. 다윈의 적자생존원리(survival of the fittest)도 생존을 위한 인간의 이기성이 생물학적 본성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효용이론(utility function)과 합리주의 이론으로 발전되어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개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겐 이처럼 합리주의적이고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미 주어진 감정(emotions)이 존재하고 있다. 이해관계 없이 가난한 사람을 돋는다든지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Frank는 인간에게는 자기 손을 스스로 구속하는 맹세(commitment)라는 감정적 성향(emotional dispositions)이 있음을 지적하고 인간의 그러한 人性 발전이 가족, 학교, 스포츠 등을 통해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Warsh, 1991 : 23~27).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건 이해관계를 떠난 이타적인 감정적 동물이건, 적어도 국내질서에서는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원색적인 투쟁을 막고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하나는 자기이익만 앞세워 남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규범으로 이를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으로 부당한 이익추구를 스스로 절제하게 하는 것이다. 법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국가조직을 통해서, 양심과 도덕은 주로 종교와 교육을 통해서 실현된다.

독립된 주권국가를 내세워 자국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원색적인 힘의 행사도 정당한가, 아니면 국가간에도 어떤 도덕 규범을 따라 자기이익만 추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가는 현실주의

(realism)와 이상주의(idealism)의 대립문제이다(Vasquez, 1986 : 1~7).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들은 도덕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힘으로써 자기 이익을 최대한 추구해 왔으므로 현실주의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지구촌 시대에도 이러한 현실주의가 지배적이라면 이는 인류문화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에도 국내질서처럼 강제력 있는 국제법 규칙과 자율적인 도덕 규범이 국제화의 속도에 맞춰 확보되어야 한다. 국제법 규칙의 발전문제는 국제정치학과 국제법학의 문제이고, 도덕 규범의 확립은 국제교육의 문제이다.

2) 國際教育의 연혁과 목적

학문의 국제화가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가 있었다. 그리스의 아카데미(academy), 알렉산더 대왕 시절, 중국의 공자시대, 중세 유럽의 볼로냐(Bologna) 등이 그 예이다. 이 시대에는 학문의 국제교류에 국가의 장애가 별로 없었고 학자들이 이곳 저곳에 여행하며 제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였고 하나의 학문용어도 발전시켰다. 그러나 18세기 말의 국립대학(national state university) 창설은 학문의 국제교류를 쇠퇴시켰다. 국가마다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찾고 국민의식(citizenship)을 강조하며, 자기 민족의 역사·문학·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의 양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에서는 토지양허(land grant)를 통해 농업과 제조업을 돋기 위해, 일본은 근대화를 위해, 소련과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을 내면화시키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차대전 이후의 신생국가들은 엘리트 공무원과 교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을 창설하였다(Kerr, 1991 : 22~23). 2차대전 후 많은 국가들이 대학 교육을 통하여 국가이익을 추진하였다. 국제화는 오히려 民族主義와 大學의 國立化를 촉진한 셈이다. 공산주의의 봉괴로 동서간의 이념 분쟁이 없어진 오늘날에도 민족주의는 학문의 국제교류를 여전히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군사·산업기술의 이전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지구촌시대의 국제교육은 상대방 국가를 적으로 알고, 적을 이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차원을 지양해야 한다. 즉, 國際教育의 目的은 인류가 긴밀히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래세계에 대비하여 민족·인종에 따른 편견을 버리고, 남의 입장에서 생을 이해하는 것(see life from someone else's point of view)이어야 한다(Tye, 1992 : 6). 이는 국내질서에서 개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최고원리를 국제질서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국가마다 다양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발전을 보장하면서 상호의 존성을 깨닫는 世界的的眼目(whole-world perspective)을 키워주는 것이 국제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 국제교육은 미래세대가 다른 나라 사람과 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통적인 인간성(common humanity of man)을 이해함으로써 바로 자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데 있다. 국제교육은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으로서 국가간 또는 문화간의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그 이질적 문화발전의 배경을 이해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창조와 같은 인간의 공동목표를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國際教育의 추진전략 및 문제점

국제교육은 그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대학에서 학문의 국제화로 추진되어 왔다. 대학의 기본목적이 학문의 연구와 전달이며, 학문의 성격이 객관적인 진리추구로서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의 영역에 따라 그 국제적 전파정도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수학·과학·공학은 지식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범세계적(cosmopolitan)으로 확대되지만, 역사와 문학 분야는 자기들의 문화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래도 역사와 문학 분야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어 문화간의 교류(intra-culture)가 가능한데, 국내 실정법·행정·교육 분야는 민족의 성격을 강하게 강조하는 국내 영역(homeground)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폐쇄적이다(Kerr, 1991 : 27~29). 지구촌의 대학에서는 역사와 문학뿐만 아니라 법과 행정 등의 민족주의적 영역도 비교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문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

생의 교류, 국제 학술대회의 개최, 외국어 교육 및 특강지역 연구(area study) 등이다. 단순한 학문의 국제화를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통적인 인간성을 깨닫게 하는 국제교육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기 프로그램들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은 옛날처럼 민족주의 정치체제의 시녀가 되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복지와 미래세계의 문화창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교수들이 폐쇄적 자세를 버리고 개방적인 국제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

지구촌 시대의 국제교육은 대학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주로 학문의 국제화에 역점을 두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과 그 문화를 이해하여 인간이 갖기 쉬운 편견을 막아주고 세계가 서로 긴밀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모든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중추적 역할을 하듯이 일선교사가 국제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국제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또한 국제교육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는 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장이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목표를 명시하여 일선교사와 주민을 설득시켜야 국제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이다(Tye, 1992 : 190).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진되는 교육프로그램은 교장과 교사의 교류, 방학중 학생들의 해외여행, 외국문화와 외국어의 교육 등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국제교육의 주제는 다른 나라의 문화, 세계의 기아와 식량문제, 세계경제, 전쟁과 평화, 자존(self-esteem), 인권, 기술발전, 환경 등이다(Tye, 1992 : 88~89).

지구촌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교육은 필연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화에 따라 나라마다 '국제경쟁'으로써 민족주의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는 과도기적인 것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장

기적으로 국제교육, 특히 대학의 창조적 역할을 통해 점차 해결할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대국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강대국들은 경제적·정치적 약소국가들을 흡수통합하려는 것보다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발전을 도와 다양하게 공존하는 것이 참다운 국제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국제화 및 국제교육이 서구문화 중심으로 되고 있는 점이다. 우선 언어에서 영어가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가치 내용에서도 서구문화가 우월시되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근대 서구에서 발전되어 왔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지만 개개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공통된 노력이었다. 성악설을 내세워 법률 등 강제규범을 일차적 행위규범으로 삼은 서구 민주주의가 지상의 최고 정치원리는 아니다. 성선설에 기초하여 양심과 도덕을 일차적 행위규범으로 삼은 동양의 정치원리도 시대상황에 따라서는 더 적절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끝으로 국제교육을 추진하는 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미국은 여러 인종으로 이뤄져 있고 많은 외국 유학생이 있어서 대학마다 국제교육 전담 부처가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는데도 연방정부는 국제교육법(The International Education Act of 1966)을 제정하여 다른 나라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선언하고 있다.

5. 맷는 말

대학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기본기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대학의 기본기능은 연구와 강의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라 할 수 있다. 학부 학생에 대한 강의가 강조되어야 하는지, 대학원 중심의 교수·연구활동을 더 지원하여야 하는지, 대학이 사회의 중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 내지 봉사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호갈등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민주주의, 산업·정보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민주사회는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이견을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 청문을 통한 공정한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적법절차, 그리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권이 강조된다. 산업·정보 사회에서는 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과 밀착되는데, 연구 분야의 불균형, 강의나 학생지도의 소홀, 연구의 공개성 위협, 재정확보 위주의 대학 행정가의 관심편중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 추세는 국제경쟁을 통한 자국이익 우선의 민족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대학 행정가는 대학의 고전적 기본기능 이외에 이 글에서 지적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대학 행정에 구현하며, 기업과 대학의 밀착관계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행정가는 국제교육을 통하여 구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공통적인 인간성과 상호의존성을 깨닫게 하는 포괄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

<参考文献>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8.
김구, 김신 편, 『백범일지』, 서울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1971.
심재우, 『인간존엄의 법리와 국가논리』, 1985.
최종고, 『법학통론』, 서울 : 박영사, 1988.
표시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해 본 적법절차의 내용”, 『경상논집』 6,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1988(a).
표시열,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 서울 : 대한교육법학회, 1988(b).
표시열,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연구”,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서울 : 박영사, 1991.
Apps, Jerold W., *Higher Education in a Learning Society: Meeting New Demands for Education and Trai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8.
Ashby, Eric, *Adapting University to a Technological Society*, San-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4.
Bok, Derek, *Beyond the Ivory Tower: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Modern Univers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Brenilly, John, *Nationalism and the Stat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Burn, Barbara B., *Expanding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High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0.
- Capra, F., *Taoism of Physics*, New York: Bantam, 1975.
- Dye, Thomas R., *Understanding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4.
- Emerson, Thomas I.,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Random House, 1966.
- Fairweather, James S., "Academic Research and Institution: The Industrial Connec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0(4), 1989.
- Krip, David L. and Others, *Educational Policy and the Law*, Berkeley: McCutchan Publishing Co., 1982.
- Merkurev, Stanislav P.,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ization for the University", *American Behavior Scientists*, 35, 1991.
- Mill, John Stuart, Currin V. Shilds(ed), *On Liberty*, Indianapolis: Bobbs-Merril Educational Publishing, 1956.
- Naisbitt, John, *Megatrends: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New York: Warner Book, 1982.
- Nigro, Felix A, Nigro Loyal G.,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tasca: Ill. F.E. Peacock Publishing, 1986.
- Nonet, Philippe, Selenick Phillip, *Law and Society in Transition: Toward Responsive Law*, New York: Harper & Row, 1978.
- Rohr, John A., *Ethics for Bureaucrats: An Essay on Law and Values*, New York: Marcell Dekker, 1989.
- Rohr, John A., *To Run a Constitution: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State*,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6.
- Rosenbloom, David H., *Public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the Public Sector*, New York: McGraw-Hill, 1989.
- Rosenbloom, David H. and James D. Carroll, *Toward Constitutional Competence: A Casebook for Public Administrator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0.
- Silverstein, Shel, *Where the Sidewalk Ends*, New York: Harper & Row, 1974.
- Smelser, Neil J., "Internationalization of Social Science Knowledg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 1991.
- Tawney, R.H., *Equality*, London: Linwin Books, 1931.
- Tye, Barbara Benham and Kenneth A. Tye, *Global Education*, Alban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 Vasquez, John A., *Class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6.
- Warwick, Donald P., "The Ethic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John L. Fleishman, Lance Lieberman & Mark A. Moore(ed), *Public Duties of Government Officia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p. 93~127.
- Warsh, David, "How Selfish Are People-Really?", *Ethics at Work*, Boston: The Harvard Business Review, 1991.